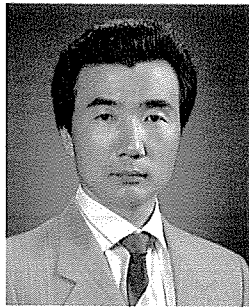


# 98년 설치되는 특허법원에 기술판사제 도입해야



楊 枝 元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교수)

## 특허분쟁 전문인이 다뤄야

지난 1년 남짓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특허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지난 7월14일 임시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998년에 특허법원이 설치되는 것으로 일단 종결되었다. 기술선진국의 경우는 예외없이 특허법원의 합의부를 구성할 때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판사, 즉 기술자 출신의 판사(기술판사)가 과반수 이상 직접 재판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법률판사들로만 구성된 합의부에서 기술심리관을 뒤에 두고 모르는 것은 물어가며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니 도대체가 세계에 거의 유래가 없는 제도인 것이다. 을사출신의 판사가 세분화된 기술분야의 특허분쟁에 관해서 무엇을 알겠는가? 아는 것이 있어야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기술심리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능력있는 과학기술자가 기술심리관직을 직업으로 택하여 판사의 보조관 역할을 자임하겠는가?

경실련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청회도 개최하였고 '기술판사제도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으로서 가두서명 발대식 및 가두서위를 주도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활동에 미력이나마 보태려고 힘써왔던 필자로서는 허무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지면이나 공청회 등을 통한 발표로써 기술판사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기회를 빌어 몇 가지 색다른 예를 들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해왔고 또한 학생들을 지도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입장에서의 시각의 일면을 첨가하고자 한다.

## 국제분쟁맨 배상금 엄청나

특허관련 재판에 있어 신속성, 공정성, 정확성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의 기술판사제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 외국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한 로열티 등 기술료 지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수출 없이는 경제발전을 할 수 없고 아무리 수출이 늘어나도 수출상품 제조시에 사용한 핵심기술이 우리 것이 아니면 국가적으로는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일에 그 핵심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걸어왔다고 가정해 보자. 패소하게 되면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활은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국제특허분쟁을 믿고 맡길 만한 능력있는 변리사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애써 개발한 기술을 국제특허화하려고 해본 경험이 있는 과학자는 특허출원 등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곳이 국내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몹시 당황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변리사의 역할과 지위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우수한 두뇌집단이 특허관련 분야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특허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건 없건 원하기만 하면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고, 변리사들은 같은 특허사건의 소송대리인을 해도 변호사들의 수입료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보상을 받으며 변호사들의 수발이나 들어주는 형국이다.

## 이공계 출신에도 지위보장을

학생들의 눈에 비친 기성 과학기술인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은 어떻게 보였을까? 바로 그들의 모습이 이공계 대학생들의 미래상이 아니겠는가?

최근에 내가 지도하는 한 학생이 석사학위만 마치고 사법고시나 아니면 과학기술정책 또는 변리사분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물론 그 학생이 과기원이나 이공계 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말을 반박할 논리를 크게 찾지 못한 채 자네같이 우수하고 책임감 강한 젊은이가 과학기술분야를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학생 개인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설득을 시도하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우수한 두뇌를 부여받았으며 지난 10년간 이상을 받음 밝히며 열심히 공부해왔고 또한 현재도 매일 밤을 실험실에서 지새고 있는 고급과학기술 두뇌들에게 장래에 뒤따르게 될 사회적인 보상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문득 미국에 있을 때 지질학자 출신인 우주인이 대학에 와서 강연했던 내용의 핵심이 생각났다. 미국제품의 경쟁력이 일본제품에 뒤지기 시작한 이유가 자기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때 공부 잘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의대와 법대로 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자본주의하에서 의대나 법대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최소한 졸업후에 이공계 출신의 전문성은 보장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적인 보상은 고사하고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풍토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자기희생을 감내해 가며 과학기술자의 길을 걸겠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결정단계에서 전문가들은 철저히 배제된다.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보려는 시각도 문제이다. 경제학자가 보는 시각은 거시적일 수가 있

고 과학기술자들은 시각도 좁을 뿐만 아니라 마음자세 또한 편협하여 자기들끼리 헐뜯고 잘 싸운다고 한다.

기술관사제도에 관한 논쟁도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기술심리관의 도움으로 법률판사가 기술문제에 관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자기들의 전문성은 강조하고 보호하려 하면서 다른 직역(職域)의 전문성은 인정을 안하려 드는가? 이 사회가 보다 바로 서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에서도 으뜸인 것이 바로 전문가를 전문가로 올바르게 대접하고 또한 나아가서 전문인을 많이 육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과학기술자들 제 목소리 낼때

그동안의 소모적인 기술관사제도 도입논쟁은 일단락이 지어졌다. 예상했던대로 법조계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인이 단결하여 기술관사제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온 국민에게 조직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특히 언론인,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심지어 양심적인 법조인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계층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론 조성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재조명해 보고 본인들이 속한 단체의 직역에 얽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활동가운데 몇몇 법학교수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법조인을 별로 못 본 듯 한데 그들이 과연 직역에 매여서만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들 중의 일부는 기술관사로서의 전문성이 특허관계 법률 지식과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정의구현은 차치하더라도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발전 더 나아가 나라의 존폐까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땅의 과학기술자들이 특허문제에 대하여 깨어나는 일이다. 과연 우리 주위의 과학기술인들이 특허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야말로 진정한 여론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인들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